

# 2015 반부패·청렴 교육



# 부패(腐敗)란?

## 부패의 어원

**Cor**(함께) + **Rupt**(파멸하다) = **Corruption**

**腐**(썩을 부) + **敗**(무너질 패) = **腐敗**(부패)

## 부패의 개념

- ✓ **광의의 개념**(공익중심) : 개인의 탐욕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는 도덕적 위해 행위
- ✓ **협의의 개념**(공직중심) : 공직자가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공직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 확장하는 행위

# 부패(腐敗)란?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법령위반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 나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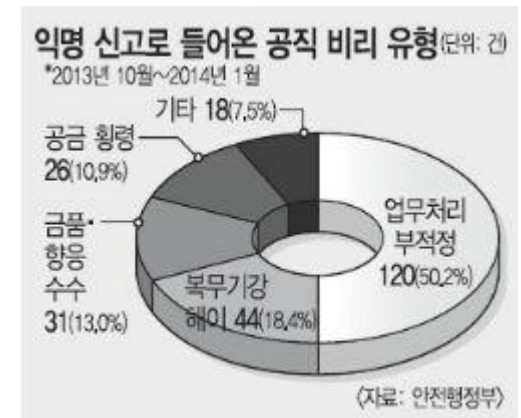
## 정부부패의 심각성

- 정부 등 **권력형 부패**
- 각종 선거에서 끊이지 않는 **불법선거자금**
-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선거(**공천헌금, 뒷돈 거래**)
- 공직후보 선출과정의 불공정 및 비민주성
- 민선4기 자치단체장 230곳 중에 110여명 검찰에 기소  
(37명 비리 및 선거법 위반으로 퇴출 ➡ 보궐선거 500억)



## 행정 및 공공부문

- 공무원 비리(건설, 각종 인허가 관련 비리 등)
-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
- 매년 처벌받는 공직자 수 매년 증가추세



# 각 분야별 부패 현황

## 경제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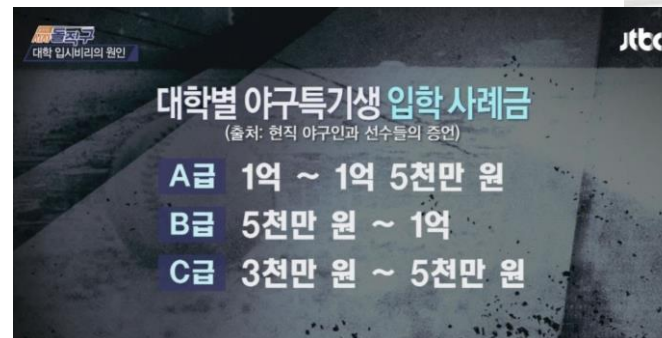
- 끊임없는 기업의 비리 행위(뇌물이면 모든 게 OK 인식)
- 재벌기업들의 비도덕성(편법상속사건, 분식회계)
- 정경유착 등 경제부문 부패 심각

최근 대기업 총수 선고 현황 (2014년 2월)

2월 11일	구자원 LG그룹 회장 사기 등 혐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상고)
1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횡령 및 배임 혐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확정
14일	이재현 CJ그룹 회장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 징역 4년(항소)
2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횡령 등 혐의 징역 4년 확정

## 교육·연구계

- 사학비리, 연구윤리 문제 등
- 입시비리





# 각 분야별 부패 현황

##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

- 세계 **수출규모 8위**(2014년 기준)
- 국제투명성기구 **국가별 부패지수 평가에서 세계 43위**
- OECD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

## 부정부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

- **연간 36조원**(2012년 북한 국민총소득 33조 5천억원)
  - ➔ 북한의 국민총소득 보다 많은 비용이 부정부패로 손실

## 국내기업이 사용한 접대비 규모

- 2013년 기준 9조 67억원, 2004년 5조4천억 대비 80% 상승
  - ➔ 1조 2천억원이 룸살롱 등 호화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
  - ➔ **정상적인 로비 및 접대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 2014년 국가별 부패지수

(단위: 점, 1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

싱가포르	1.60	한국	7.05
일본	2.08	중국	7.10
호주	2.55	필리핀	7.85
홍콩	2.95	캄보디아	8.00
미국	3.50	태국	8.25
마카오	3.65	베트남	8.73
말레이시아	5.25	인도네시아	8.85
대만	5.31	인도	9.15

자료: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팅사(PE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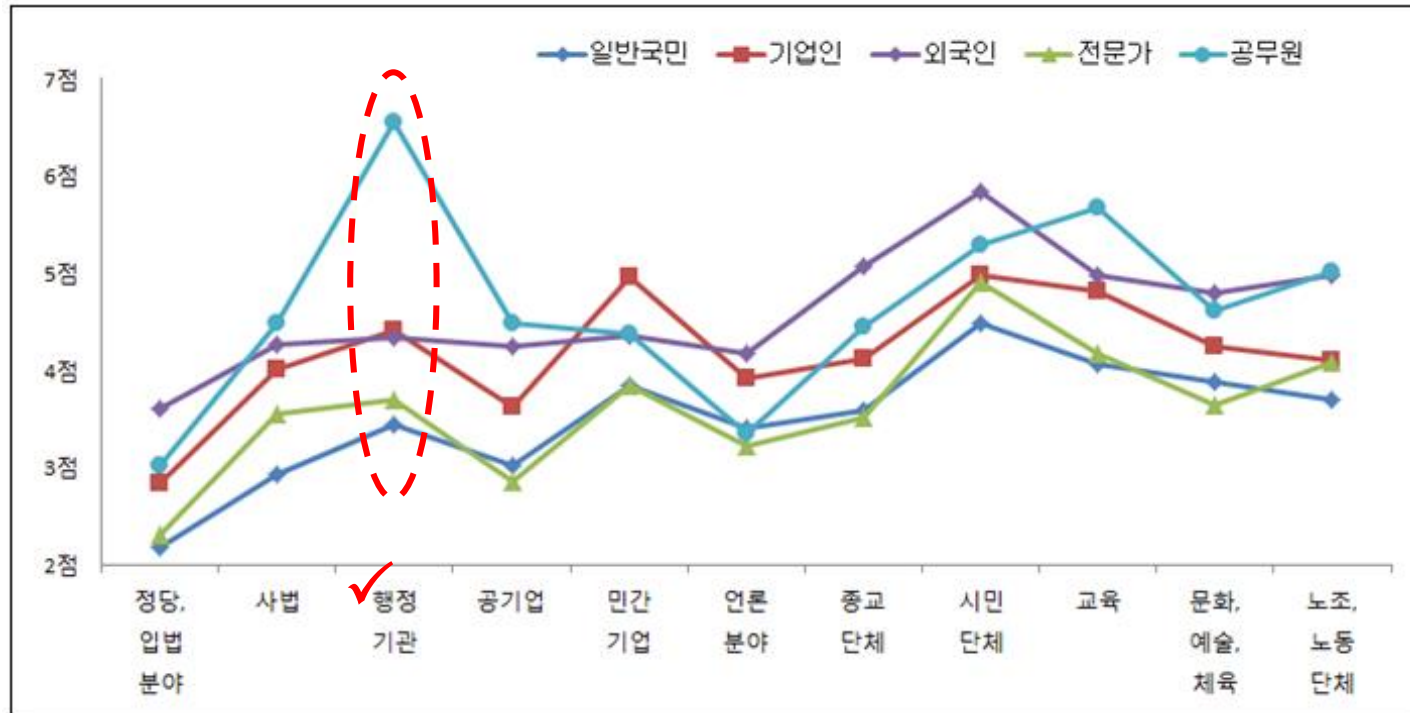
## 공직부패 실태

· 2011년 공무원 징계 현황: **2,653명**



행정자치부 「공무원 징계현황」

## 2014년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조사 결과 (조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모든 조사대상이 **정당·입법(평균 2.79점)**을 가장 부패한 사회분야로 평가
-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은 시민단체(평균 5.10점)를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한 반면, 공무원들은 '행정기관'을 가장 청렴한 것으로 인식하여 다른 평가대상의 인식과 큰 차이를 보임



### 국제투명성 기구란?

- <Transparency International> 약칭 **TI**

### 국제적 국가적 부패를 통재하기 위한 NGO

-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독일 베를린**에 있음
- 전 세계 82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음

### 1995년부터 매년 부패지수를 조사·발표

- **1999년부터는 뇌물주는 입장의 뇌물공여지수를 발표**  
(BPI : Bribe Payers Perception Index)



### 2014년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 한국 100점 만점 기준 55점(2013년 55점)
  - ※ 싱가포르(84점), 홍콩(76점), 일본(74점)
- OECD 가입 34개국(평균 6.97) 가운데 27위 차지(08년도 22위)
- 최 상위 국가 덴마크(92점)으로 1위, 뉴질랜드(91점) 2위, 핀란드와 스웨덴 순
  - ※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와 함께 최 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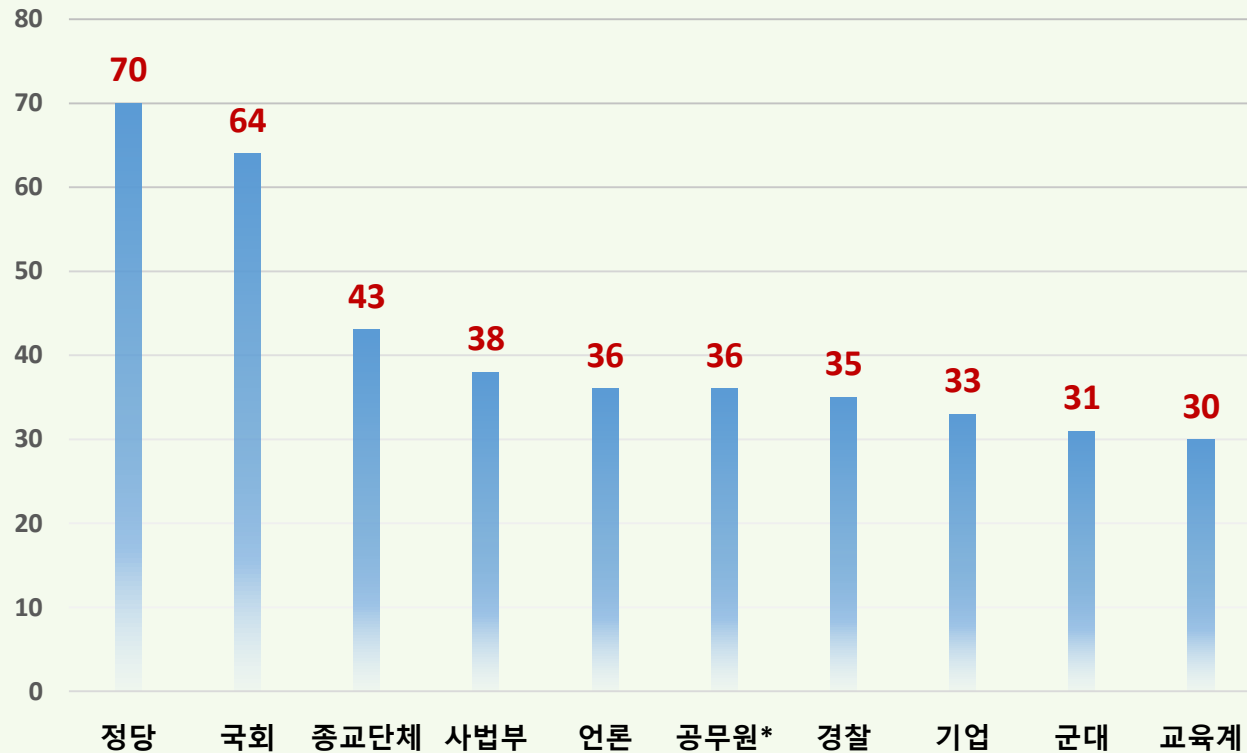


### 부패인식지수(CPI)가 하락한 이유

- 권력 부패, MB정부의 부패방지 관련 기구 통폐합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폐지, 정부의 반부패 정책 의지 후퇴 등

###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집단 TOP 10

(응답률)



\* 공무원은 군인, 경찰을 제외

## 공직자 행동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 기존에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던 **부패 관련 규정을 종합한 법규범**
- 공직사회에 적용하는 것으로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 중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제시한 규정

## 공직자 행동강령 도입 배경

- 공직자의 역할 및 중요성 증대
-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수단
- 높아진 국민 윤리수준에 부응
- 부정부패로부터 공직자 보호
- 국제적 흐름에 부응



# 공직자 행동강령(주요내용)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재차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 가능

###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 특혜의 배제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차별 금지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 • 정치인 등 부당한 청탁에 대한 처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적절한 조치



### 부당이득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를 이용,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금지

####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행위 금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금지

####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의 거래 또는 투자 금지

####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관용차량·선박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의 사적인 사용·수익 금지

####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금지.  
(단,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등은 제한적 허용)

### 건전한 공직풍토가 조성됩니다.

#### ·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을 할 경우 미리 소속기관의 장(총무과)에게 신고  
(단,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인 경우는 제외)

#### · 금전의 차용 금지 등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와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는 행위 금지 ➡ 부득이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 · 경조사의 통지 제한

- 직무관련자 등에게 통지 금지. 단, 다음의 경우에는 통지 가능
- 친족, 전·현 소속 기관 직원에 대한 통지, 신문/방송 또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5만원 이내)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수수 금지  
(단, 친족간 또는 친목단체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경조금품은 가능)

## 공직자 행동강령(주요내용)

### 위반 시에는 징계 등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위반행위의 신고

행동강령 위반사실은 누구든지 신고 가능하며, 모든 공직자의 위반행위는 국민권익위에 신고 가능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직무수행 중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에 처리

-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금지된 금품 등의 반환 :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

직무관련자로부터 받게 된 금품 중 제공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즉시 총무과에 신고

-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충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25조에 따라 **총무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

# 부패행위 신고

## •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 부패행위 사례

- ▶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절차까지 생략, 대금 지급
-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계약관련 비밀을 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 공공기관이 불용되는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필요없는 기자재를 구매하여 수년간 창고에 방치

## • 부패행위 신고

- 상담전화 :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청렴신문고(1398.acre.go.kr)

# 공익신고

##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 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담합 등

## · 공익신고

- 상담전화 :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청렴신문고(1398.acre.go.kr)



## 김영란 법이란?

- **불법로비나 접대 등 부정부패**를 막아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 ※ 본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 법 적용대상

- **공무원** :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등
-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해운조합 등
- 교사 및 **교직원** :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유치원 등
- 언론사 기자 및 직원 : 공영방송 및 민간방송사·신문사

## 금지사항

- **부정청탁 금지** : 부정한 청탁은 해서도 들어주어서도 안돼요!
- **금품수수 금지** : 돈이나 선물을 1회 100만원 넘게 받으면 안돼요!



## 이게 다 부정청탁입니다.

### · 법령기준을 위반하여 공직자에게

1. 인허가·면허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각종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 등 공직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심의·의결 등의 권한을 가진 위원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의 수상·포상 등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시험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정부의 각종 지원금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특정인이 일감·용역 등을 사용하거나 독점하도록 하는 행위
10. 학교의 입학·성적 등의 업무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부대배치 등 병역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의 평가·판정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단속·감사 대상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14. 수사·재판 등에 개입하도록 하는 행위
15. 1~14에 대해 권한 밖의 일을 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 시 처벌 받아요

부정청탁을  
받고 실행한  
공직자



**형사처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청탁을  
한 사람



**과태료**

(최대 3천만원 이하)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거듭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이게 다 금품입니다.

돈, 선물,  
부동산

증권,  
숙박권,  
회원권

교통·  
숙박 제공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골프,  
술(접대)

빚 면제,  
일자리 제공

※ 일정범위 내의 경조사비나 선물, 회사의 격려금 등은 제외

### 대가성과 관계없이 금품수수 시 처벌 받아요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 등 형사처벌〉

-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 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 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가성과 관계없이 금품수수 시 처벌 받아요

#### <1백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과태료 부과>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 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 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과태료 부과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일류대학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청림”

